

보도시점 (전매제) 5. 20.(화) 14:00

중기부-서울회생법원 맞손, 기술과 소상공인의 제2의 도약 돕는다!

-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희생·파산 패스트트랙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일(화), 서울회생법원에서 ①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②소상공인 파산·희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도 6건으로, 그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하여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향후 서울회생법원과의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성섭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정렬 (044-204-7780)
	기술보호과	담당자	주무관	류관승 (044-204-7784)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소상공인재도약과	담당자	사무관	유기석 (044-204-7856)
		담당자	주무관	박진혁 (044-204-7829)

□ 추진배경 및 내용

- 경영악화로 우수기술 보유기업이 파산 시, 보유 기술도 함께 사장
 - * 법인 파산(건) : ('21) 955건 → ('22) 1,004건 → ('23) 1,657건 → ('24) 1,940건
- 자체 또는 정부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의 사장은 국가적 손실
 - * ('24년 중기부 R&D) 1.4조, 1.2만 개 과제 / ('22년 정부 중기 R&D) 5.5조, 5.4만 개 과제
-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기술경쟁력 보존 필요
- 이에, 파산기업 보유 기술의 재활용을 위해 기보가 법원으로부터 중개위탁 받아 매각 추진

□ 세부 추진내용

- 파산기업 보유 기술의 재활용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법원으로부터 중개위탁 받아 매각 추진
- 심의회를 통해 매각대상 특허를 선별하고, 가격을 결정하여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에 공고
 - * AI를 활용한 기술 추천·매칭 및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 등 제공(운영 : 기술보증기금)
- 매각 기술과 수요기업 간 매칭(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계약 추진

□ 시범사업 추진 성과

- 매각 공고('25.2)한 27건 중 10건을 매칭('25.3)하여 계약체결 예정
- 매각예정 10건의 총 가격은 34백만원(5백만원 2건, 3백만원 8건)
 - * 매칭 10건 중 9건은 기술이전계약체결이 완료, 1건은 계약체결 진행 중

□ 매각예정 특허 특징

※ 현재('25.5.15) 기준 매칭된 10건 중 9건은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건은 계약체결 진행 중

- (관련 분야) 10개 중 9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이며, 나머지 1개는 바이오 소재 관련 특허
- (거래특허) 3개는 대학 → 민간 기술이전 특허이며, 민간 → 민간 이전 특허도 1개 존재
- (국가 R&D 특허) R&D* 참여를 통해 개발한 기술 3개(지자체 1개, 정부 2개)

* 지자체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2015년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 정부 : 중기부 기술혁신개발(2년, 6억원), 중기부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2년, 6억원)

특허명		분야	매각금액
1	지자체 R&D+민-민 기술거래개인 맞춤형 한방 검진 방법 및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5백만원
2	공공기술거래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이용한 실사와 CG 합성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 및 시스템		
3	정부 R&D네트워크 장애예측 시스템		3백만원
4	정부 R&D빅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퍼블리싱 자동화 시스템		
5	온라인 기반의 자기 주도 학습 코칭 방법		
6	공공기술거래 MLD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분류 장치 및 그 방법		
7	건강 기능 식품 섭취 관리 장치 및 방법		
8	공공기술거래 3D 디지털 캐릭터 생성을 위한 복합 편집 시스템 및 방법		
9	무선랜을 이용한 실시간 콘텐츠 제공 시스템		
10	뱀독펍타이드를 이용한 마스크팩	바이오소재	

□ 기대효과

- 정부 R&D 결과물의 재 활용 구조 구축을 통한 정부투자 중복 방지 등

참고3

스마트테크브리지 플랫폼 개요

- (개요) 중소기업의 수요기술과 공공연이 보유한 공급기술을 연계·집중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소주기를 지원하는 기술거래 및 M&A 플랫폼



- (특장점) ①수요·공급기술 정보 집중, ②On/Off-Line 연계 지원, ③AI 엔진 탑재, ④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토탈 서비스 지원

- ① (정보집중) 범부처 R&D 성과물(특허, 과제, 논문) 등 공급기술을 Open-API를 통해 자동 수집하여 플랫폼에 집중

수집정보	공급기술			
	특허·실용신안	R&D과제	논문	합계
수집현황 ('25년 4월 기준)	19만건	30만건	91만건	141만건

- ② (On/Off-Line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오프라인 영업망(영업점, 대외기관)이 백업하여 기술이전 수요발굴*, 중개**, 계약 및 금융지원 등 원스탑 서비스 제공

* 고객접점 보유 대외기관을 기술거래 서포터즈(8개 기관, 185명)로 선정하여 수요발굴 확대

** 민간기술거래기관(51개)과 공동중개를 통해 민간 기술거래기관 육성

- ③ (AI 매칭·추천) AI 엔진과 기보의 기업정보를 연계하여 국내 유일 AI 기반 기업 맞춤형 매칭·추천 서비스 제공

- ④ (전자계약) 전자서명 유효성 검증(시점인증, 위·변조방지)을 통해 특허청 등록원인서류로 인정 가능한 유일한 전자계약시스템* 제공

* 전자 기술이전계약 활용실적: ('23년) 680건 → ('24년) 1,184건 (74% ↑)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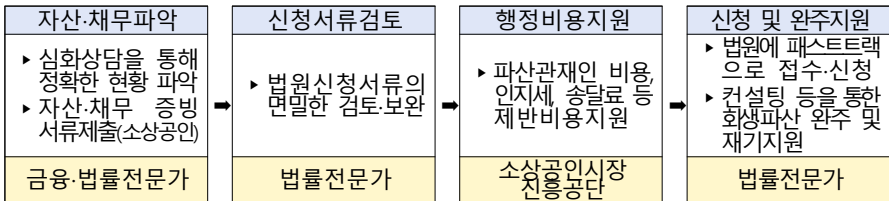
- 자영업자 대출연체 증가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확정까지 많은 시간(약 12개월)이 소요되어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
 - * 자영업자 대출연체율(한국은행) : ('21.4Q) 0.52% → ('24.4Q) 1.67% <약 3배 ↑>
 - ** 개인 회생·파산 신청(법원월보) : ('21) 130,093건 → ('24) 169,602건 <약 30% ↑>
-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원과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

□ **추진방안**

-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 경유사건) 신설

* 중기부-서울회생법원 업무협약(MOU) 체결(5.20)

<패스트트랙 지원방안>



-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원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의 자산·채무 파악, 신청서류 검토 등 실시
- 법원 신청 후, 행정비용 지원, 채무조정절차 모니터링, 재도산 예방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인 회생·파산절차 완주 및 재기 지원

□ **향후계획**

- 소상공인 공적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파일럿 테스트 진행('25.5~'25.4Q)
- 서울회생법원과 패스트트랙 시범 적용 성과를 분석하고, 기타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과 확대 추진방안 논의('26~)